

이재명 “재건축·재개발 활성화”…文 정부와 차별화

서울 강북 노후 아파트 주민 간담회 문 정부 규제 일변도 정책 비판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 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 직후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공급 확대뿐 아니라 강남·북 간 균형발전,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선대위는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책 발표식에서 “역대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나 그렇다고 국민의 불만을 방치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실패했다고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황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며 “지지층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역·추수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의 실용주의적 정책추진은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합리화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가 전날 당사에서 열린 안보인사 영입식에서 예정에 없던 ‘북한 미사일 관련 입장’을 발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것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결을 달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도발’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 보다 낮은 ‘유감’이나 ‘우려’를 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합의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 발미가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전방위적 정책 차별화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 후보라면 정책도 민주당의 기본 정신과 토대 위에 서야 하지 않겠느냐”며 “중도실용을 표방하는 것 같은데 지지층을 잃을 수도 있어 불안하다는 목소리들이 있다”고 했다.

특히 송영길 대표의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는 발언을 두고는 당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가뜰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가까스로 내홍을 봉합, 다시 지지율이 회복세를 맞은 상황에서 여권 내 불필요한 파열음을 냈다는 지적이다.

이미 청와대 출신을 비롯한 친문 의원들, 이낙연 전 대표와 측근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여권 원로인사인 유인태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송 대표를 향해 “원래 가끔 사고를 치는 친구다. 불안한 친구”라며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러한 시점에서 당 대표 같으면 말 한마디(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표가 좀 말이 먼저 많이 앞서 나갔다고 본다. 약간 오버한 것 같은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강 의원은 “송 대표의 발언 때문에 혹시 원팀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를 훼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파장 차단에 주력했다. 수도권에 한 중진 의원은 “송 대표가 사과하고 수습해야 할 만큼 문제가 컸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37%·윤석열 28%·안철수 14%

4개 기관 대선 다자대결 조사 18~29세 이·윤 21%로 동률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두자릿수 지지율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대선 일정을 전면 중단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큰 변화가 없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4차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37%, 윤 후보는 28%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 3~5일 진행한 직전 조사보다 이 후보는 1%포인트 올랐고, 윤 후보는 그대로다. 두 후보의 격차는 9%포인트다.

최근 일부 다른 여론조사의 다자대결에서 당 내홍을 봉합한 윤 후보가 반등하면서 이 후보와 박빙의 접전을 벌인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였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14%로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심 후보는 1%포인트 오른 3%로 집계됐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후보’는 17%로 전주 대비 3%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선거에서 주목받는 세대인 18~29세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지지율이 각각 21%로 같았고, 안 후보가 16%로 나타났다. ‘태도 후보’는 33%에 달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가 이 후보를, 27%가 윤 후보를 뽑았다.

이 후보 지지층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43%)을, 윤 후보 지지층은 ‘정권교체’(70%)를 지지 이유로 들었다. 응답자의 70%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으며, 29%는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이 후보 지지층의 81%, 윤 후보의 74%, 안 후보의 43%, 심 후보의 33%가 계속 지지 의사를 밝혔다.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는 이 후보(43%), 윤 후보(18%), 안 후보(15%), 심 후보(2%) 등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 50%로 긍정적(44%)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30%, 국민의당 8%, 정의당 4%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9.3%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지역경제가 나라경제 근간…지역소비 회복돼야”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제 김영록 지사 지역현안 지원 건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역경제가 나라경제의 근간”이라며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로,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등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회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때문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는 명실

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란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 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초광역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바란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토론 자리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지방재정분권을 크게 진전시킨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며, 지역 핵심현안인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 지사는 “한태평양의 관문에 위치한 남해안남부권, 광주·전남 및 부산·울산·경남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우주산업벨트, 탄성소재산업벨트 등으로 영호남의 화합을 넘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이미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해 올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간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은 국가발전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한국에너지공과대의 3월 입학식에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흥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학부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 집 인 원	
		정 시	정 원 외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사 범	유아교육과	6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용음악학 전공	12	
총 계		7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일반편입(3학년)	○	○
		학사편입(3학년)	○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악학부	○	○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2. 1. 10(월) ~ 1. 21(금)
· 전 형 일: 2022. 1. 25(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제로 36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